
비주류 경제학의 주기적 회기

로베르토 랍과

아르헨티나 국립 과학기술 연구위원회 연구원

원제와 출처: Roberto Lampa, "El sinuoso regreso de la economía heterodoxa",
Nueva Sociedad, No. 268, marzo-abril de 2017, pp.87-99.

핵심어: 경제학, 비주류(이단), 비판적 사고, 진보주의, 라틴아메리카

최근에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에서 발생한 정치적 격변은, 지난해 우루과이에
서 광역전선(Frente Amplista) 연립 정부가 시행한 재정 정책의 변화와 마찬가지로,
남미에서 장기적으로 시현됐던 진보 성향의 종식과 신자유주의적 경제로 복
귀를 사실상 뜻한다. 다만, 이러한 정치-경제적 새로운 결합과 관련하여 그동안
잘 고려되지 않은 측면이 한 가지 있는데, 이는 새롭게 등장한 보수 정권이 경제
담론의 전환을 이뤄내기까지 격렬한 논쟁이 있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아르
헨티나의 마르코스 페냐 브라운(Marcos Peña Braun) 수석장관은 "비판적 사고는
지적인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아르헨티나에서 비판적 사고는 오히려 아르헨티나

경제에 큰 해를 끼쳤다”고 언급한 바 있다.¹⁾

이는 남미 대륙의 모든 보수 세력이 공감하는 부분이며, 이 지역의 헤게모니로 자리잡았던 비판적, 즉, 이단적 정치경제학적 논쟁이 더 이상 불필요함을 의미한다. 이는 지난 10년 동안 포퓰리스트 정부가 정치 및 경제 사상의 영역에서 급진적인 변화를 부추기는 데 성공했음을 간접적으로 암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필자의 경제학적 시각으로 볼 때, 두 경우 모두 실제 일어난 상황을 과대평가하고 있다고 사료된다. 최근 일련의 사건들을 신중히 살펴보면, 좌파 성향의 정권과 비주류 경제학의 관계는 복합적이며, 남미 국가들의 경제 당국이 비판적 사고로 회귀하는 일은 순탄하지 않으며 장애요인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브라질

가장 상징적인 사례는 의심의 여지없이 브라질이다. 일반적으로 신흥 국가에서 주류 경제학 성향의 정책의 수준은 무엇보다 국가경제의 개발 정도에 달려 있다고 간주된다. 이는 특정 국가의 개방도가 높을수록 자국이 독립적으로 사 용가능한 정책 도구와 정책의 목표 범위가 점차 축소되기 때문이다. 보다 정확 하게 말하자면, 자본주의에 있어 신자유주의는 국가 간 경쟁의 확대, 더 나아가서는 임금구조 개편, 각종 규제, 복지 국가의 확장에 대한 반대급부로 경제의 최대 효용성에 대한 끊임없는 추구라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경향은 학계에서 오랫동안 일명 ‘바닥을 향한 경주’ 가설에 의해 설명

1) 2016년 12월 8일 방영된 신호에 대한 두 가지 견해라는 프로그램에서 마르코 페냐 브라운 수석장 관과의 인터뷰 중 Entrevista a Marcos Peña Braun en el programa *A dos voces* en la señal *tn*, 8/12/2016, disponible en <www.youtube.com/watch?v=zpdfohx2la>.

되어 왔다. 이 이론에 따르면, 신흥국들이 경쟁우위를 지니면서 대규모 투자처로서 매력력을 가지고 있을 경우, 금융과 상업의 개방으로 엄청난 혜택을 얻을 수 있다. 그러한 개방으로 인해 정부의 경제정책과 목표는 《외적 조건》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즉, 특정 국가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 또한 결정해야 하는 모든 사안들이 불가피하게 타 국가 또는 경쟁자들의 결정에 의해 영향 받게 된다. 따라서 해당 국가의 경제정책은 세계적인 수준을 갖추게 되지만, 임금, 환경규제, 자본에 대한 통제 감소에 따른 불평등, 금융 변동성, 환경오염 증가를 야기하는 것으로 여러 실증 연구²⁾를 통해 드러났다.

피에르 살라마(Pierre Salama)가 2011년 논문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룰라의 1, 2기 정권 모두 《주류경제학적》흔적은 존재했었다. 1기 정부에서는 주류경제학적 접근이 분명히 우세했다. 반면, 2기 정부에서는 비록 다양한 주류경제학적 정책(예를 들면, 물가상승률 목표, 높은 이자율, 최소의 공공투자, 높지 않은 수준의 재정수입)이 유지되긴 했지만, 모종의 《비주류경제학적》개입이 굳건해지는 경향이 드러났다. 유사한 경향이 지우마 호세프 정부에서도 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가령, 《친룰라》파인 기도 만테가(Guido Mantega) 장관과 진정한 주류경제학자로 분류되는 레비(Joaquim Levy)가 재무부를 이끌었다. 레비는 브라질 역사상 최초로 연례적인 최소임금 상승을 막은 인물이다. 비주류 경제학자가 재무부를 이끌었던 시기는 호세프 탄핵 이전 혼돈의 5개월이 유일한데, 이때 바르보사(Nelson Barbosa)가 재무부 장관을 역임했다. 바르보사는 비주류·비판적 경제학 분야의 최고 권위를 지닌 뉴욕 뉴스쿨(New School for Social Research) 출신 학자이며, 동시대 구조주의 경제학자 중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의 한 명인 테일러(Lance Taylor)의 제자이기도 하다. 5개월은 이전의 기조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2) 일례로 2008년 OECD 보고서 “Growing Unequal?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in OECD Countries”를 참고하라.

시도하기에 충분한 기간은 아니었다.

이러한 전제하에 가장 흥미로운 점은 룰라 및 호세프 정부와 비주류 경제사상 간의 접점이 존재한다는 것인데, 그것은 산업정책의 부활이다. 1980년대 이래 남미대륙에서 일어난 신자유주의적 개혁 중의 하나는 산업정책을 위한 수단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었다. 브라질은 피게이레두(João Baptista de Oliveira Figueiredo) 대통령 재임 중이던 1983년, 국가 경제위기에 따른 IMF 요구조건의 이행을 위해 산업정책을 위한 수단을 버려야 했다. 반면, 노동당(PT)이 집권한 시기에는 브라질 은행인 BNDES가 다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 2005년 GDP의 2.2%에 불과한 신용 규모가 호세프 집권 당시 4%로 확대되었다. 달리 말하면, 브라질에서의 비주류 경제사상은 전통적 개발주의 또는 케인즈주의도 아닌 신-슘페터주의의 경제진화론으로 볼 수 있다.

신-슘페터주의적 경제진화론은 20세기 초반에 혁신을 강조하는 경제발전 이론을 확립한 슘페터(Joseph Alois Schumpeter)의 선구적인 업적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슘페터는 은행의 역할은 사업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다고 강조하였다. 경제발전은 시장의 자율적인 시스템이 동작하여 즉흥적으로 도출되는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사실상 계획된 과정으로 즉, 경제발전을 위한 전략 산업이 사전에 규명되고, 신용정책을 통해 해당 산업에 지원이 집중됨으로써 가능하다. 여기서 혁신적이지 않거나 경쟁력이 없는 기업들은 시장에서 퇴출된다.

이러한 시각은 이탈리아 경제학자 라비니(Paolo Sylos Labini)에 의해 재발견되었는데, 그는 슘페터의 독창적인 생각을 중소기업(SMEs)에까지 확장시킨 장본인이다. 최근에는 이탈리아계 미국인 경제학자인 마리아나 마주카토(Mariana Mazzucato)의 저서 <창업주 정부: 정부 대 민간 부문의 신화(2013)> 덕분에 신-슘페터주의가 재조명되었다. 저서에서 마주카토는 슘페터가 고려하지 않은 문제 즉, 정부의 개입에 대한 불신 때문에 만족스러운 해답을 제시하기를 거부했

던 문제를 지적하기는 했지만, 혁신에 관한 핵심사항을 잘 담아내고 있다: 혁신은 불확실하고 오랜 시간에 걸친 축적의 과정으로 민간에게 특히 초기 단계에서는 경제적으로 매력적이지 않은 대안이므로, 정부가 혁신의 동력을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가 예산을 과감하게 투자하여 전문기관을 통한 기초 연구를 시행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과학 및 기술에 대한 투자를 브라질 산업정책의 핵심 요소로 볼 수 있다. 브라질 과학기술혁신부처 산하 기관을 통한 R&D(연구개발)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도출했다. 라틴아메리카의 유일무이한 입자가속기(Sirius)의 구축이 좋은 예이다.

비주류 경제사상은 비록 브라질 행정부 내 고위직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지만, 학계에서는 크게 활약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한 연구³⁾에 따르면 브라질 대학의 경제학 교수의 42%가 비주류학파에 속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래에서 설명하겠지만, 남미지역의 타 국가들과 비교해본다면 의미 있는 결과다.

우루과이

언뜻 보기에 브라질에 대한 설명이 우루과이에도 적용 될 수 있을 것 같지만, 과거와 현재를 모두 살펴봐도 좌파성향의 정부와 비주류 경제사상의 연관성을 찾기는 매우 어렵다. 오히려 대부분의 경우, 우루과이 재무부 장관과 중앙은행 관리들은 주류경제학파로 분류된다.

우루과이 현 재무부 장관인 다닐요 아스토리(Danilo Astori)의 그간 발언들을 살펴보면, 아스토리 장관은 재정확대에 대해 강한 회의감을 표명해왔으며, 대내외

3) 브라질 상파울로 시청인 São Bernardo do Campo에서 열렸던 제21차 정책경제학 전국회의(2016.5.31.~6.3.)에서 Rafael Galvão de Almeida와 Ian Coelho de Souza Almeida가 공동발표한 논문인 《Issues in Teaching of Economics and Pluralism in Brazil》

거시균형을 강조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로 인해 아스토리 장관은 우루과이 여당인 광역전선연립(Frente Amplio)정부와 종종 대립했다. 그럼에도 첫 임기(2005-2008) 동안 아스토리 장관은 조세개혁을 단행하는데 성공했다(2006년 12월 법 18083이 제정됨). 조세구조가 여전히 매우 역진적인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 비교할 때 우루과이의 조세개혁은 큰 성과로 평가된다.

선진국들과 유사한 조세수입 구성을 달성한다는 목표 하에 우루과이는 조세개혁을 통해 소비에 대한 왜곡된 과세를 폐지했다. 시장 전반의 분배 사슬에 영향(낙수효과)을 미치는 부가가치세(VAT)를 인하하고 도매세를 폐지했다. 누진세율 도입과 함께 소득에 대한 과세를 재도입했으며,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도 부과했다.

이러한 조세개혁의 결과 우루과이의 소득 불평등 지수가 크게 감소되었는데, 2006년 0.46이었던 지니계수는 2016년 0.382로 떨어졌다. 이로써 우루과이는 남미지역에서 가장 소득 불평등 지수가 낮은 국가가 되었는데, 이는 유럽 국가들과도 비견할만한 수준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 10년간 최상위층(소득 상위 10%)과 최빈층(소득 하위 10%)의 소득 차이는 19배에서 12배로 감소하였다. 진보성향의 정권 하에서 우루과이는 이례적인 역설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즉, 비주류 경제사상에 대한 회의적인 태도가 케인즈주의적 대담한 개혁을 동반한 것이다. 특히 소득에 대한 과세는 케인즈가 주창한 고용과 이자, 화폐에 대한 일반이론에 기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이와 같은 우루과이에서의 특수한 현상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우루과이의 길》의 대중화에 기여한 호세 페페 무히카(José Pepe Mujica) 우루과이 전 대통령의 담화에서도 드러난다. 주요 국제회의(특히 2012년 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인 리우+20)에서 무히카 대통령의 연설은 최근 비주류경제학이 제시하는 패러다임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즉, 자원의 희소성을 고려한 경제성장에 대

한 이념을 드러냈는데, 각종 환경 위기를 초래한 선진국의 발전방식을 따르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프랑스 경제학자 세르주 라투슈(Serge Latouche)가 주장한 이론인 ‘행복의 감소 이론과 연관성이 있다. 라투슈는 서구화된 삶의 방식이 중국에는 지구의 파멸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소규모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생산과 소비를 통해 작은 경제 전략을 제안한 바 있다.

무히카 대통령은 인간의 삶의 질을 측정하는 GDP와 같은 전통적인 지표에 대해 비판적이었는데, 이는 센(Amartya Sen), 스티글리츠(Joseph Stiglitz), 피투시(Jean Paul Fitoussi)가 공동으로 2009년에 발표한 논문⁴⁾의 내용과 연관된다. 저자들은 동 논문에서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발전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GDP의 한계에 대해 지적하면서 경제성장으로 인한 웰빙(소득, 실현가능성, 환경적 건전성 측면에서)은 물론 미래지향적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측정 가능한 GDP에 보완적인 지표 개발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무히카 대통령의 경제발전이 개인의 행복을 희생하면서 추구될 수 없다는 주장은 행복경제학 분야의 연구들과도 관련성이 있다. 행복경제학자들은 행복을 결정하는 공통의 패턴이 있다고 가정하고, (다소 주관적인) 설문조사와 객관적인 통계에 근거하여 행복을 측정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행복을 결정하는 1인당 소득의 중요성을 인정하지만, 행복과 소득의 관계는 선형관계가 아니며, 1인당 소득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님을 강조한다. 행복경제학자들은 정부의 경제성장에 관한 전통적인 시각을 변화시키고, 자원의 재분배 등을 통한 보다 지속가능한 성장전략을 채택하도록 노력한다.

요컨대 브라질과 우루과이 두 국가 모두에서 현대적인 비주류 경제학적 논쟁

4) 역자주: Stiglitz, J.E., Sen, A., Fitoussi, J.P., 2010. 《Mismeasuring Our Lives: Why GDP Doesn't Add Up》 The New Press, New York

과 접점이 되는 부분을 찾을 수 있었으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비주류 경제학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더욱 컸던 아르헨티나에 대해서도 유사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아르헨티나

지난 12년간 네스토르 키르치네르(Néstor Kirchner)정부에서 비주류 경제사상의 영향은 지속적으로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키르치네르 대통령의 재임 초기에는 비주류 경제학에 대한 절충적인 시각을 지닌 경제학자 로베르토 라바그나(Roberto Lavagna)가 재무부를 이끌었다. 2003년 IMF 개입과 그에 따른 채무 재조정 상황은 주류 경제학의 전형적인 가설만으로는 설명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었다.

비주류 경제사상은 노동시장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다. 2005년 기준, 아르헨티나는 일자리 보장 정책을⁵⁾ 실행하는 몇 안 되는 국가들 중의 하나였다. 무주택자와 실업자를 대상으로 200만 개의 사회적 일자리가 제공되었으며, 네 시간의 지역사회 및 사회봉사에 대해 최소임금이 지급되었다.

일자리 보장에 대한 아이디어는 미국 제도주의학파이자 케인즈학과 비주류 경제학자인 하이만 민스키(Hyman P. Minsky)에 의해 제시되었다. 일자리 보장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 다음과 같다. 경기침체와 높은 실업률이 장기화될 경우, 실업은 구조적인 현상으로 고착되며, 이는 곧 노동시장에서 영원히 나오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후 경제성장이 진행되고 일자리가 창출되더라도 시장에서 나오된 유휴 인력들이 인구에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상당할 것이다. 민스키는

5) 미국에서는 1960년대에 Lyndon Johnson 대통령이 '빈곤과의 전쟁' 프로그램 일환으로 일자리 보장 정책을 실시한 바 있음.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에 의한 일자리 창출을 제안했다. 이 때 임금은 최소임금 수준을 넘지 않아야 한다. 경제가 다시 살아나면, 민간부문의 일자리 수요가 증가할 것이며, 이에 따라 제시하는 임금 수준 역시 증가할 텐데, 최소임금을 받던 노동인력들은 자연스럽게 민간부문으로 이동한다는 것이다.

전술한 연구 경향은 최근 레비(Levy) 경제연구소 소속의 경제학자인 랜달 레이(Randall Wray)와 파블리나 쳐네바(Pavilina Tcherneva) 등에 의해 심화되고 있으며 이들은 2003년과 2005년 사이 아르헨티나 정부의 정책 수립에 기여한 인물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 까지 아르헨티나 경제정책이 《비주류》 성향을 드러낸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해석일 수 있다. 무엇보다 통화정책과 아르헨티나 중앙은행(BCRA)의 고위 관료의 성향을 보면 더욱 그렇다. 2003-2010년 사이 중앙은행 총재는 알폰소 프라트-가이(Alfonso Prat-Gay)(이후 마크리 정부 재무부 장관), 마르틴 레드라도(Martín Redrado)와 같은 전형적인 주류경제학자들이 역임했다. 아르헨티나 중앙은행(BCRA)은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불가안정이 주요 목표라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분위기는 2010년 비주류 경제학자인 메르세데스 마르코 델 폰트(Mercedes Marcódel Pont)가 아르헨티나 중앙은행(BCRA)의 총재로 지명되었을 때 비로소 전환되기에 이르렀다. 중앙은행의 정관이 수정되었으며, 전형적인 후기 케인즈주의적 입장이 드러났다. 개정 정관의 3조에 따라 중앙은행은 더 이상 독립적이지 않게 되었으며, 운영 목표 역시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중앙은행의 목표는 국가가 수립한 정책 범위 안에서 통화 안정성, 재정 안정성, 사회적 평등을 고려한 고용 창출 및 경제개발을 촉진하는 것이다.”

마르코 델 폰트(Marcódel Pont)는 내생적 통화 공급 이론(화폐발행이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친다는 화폐수량설을 부정하는 후기 케인즈주의 비주류 경제이론)에 대한 지지를 종종 나타냈다. 1990년대 주류 경제학자들이 우세했던 중앙

은행총회에 마크 라브아(Marc Lavoie), 안와 샤이크(Anwar Shaikh), 마크 세터필드(Mark Setterfield), 필립 미로우스키(Philip Mirowski) 등이 참석하면서 후기 케인즈주의, 마르크스주의, 구조주의 등의 비주류 경제사상이 유입되기 시작했다.

아르헨티나 경제정책 당국과 비주류 경제학자간의 연대는 키르치네르 대통령의 2기 임기 말까지 이어졌다. 2013년에는 케인즈주의 연구자이나 비주류 경제학자⁶⁾인 악셀 키칠로프(Axel Kicillof)가 재무부 장관으로 지명되었다. 키칠로프 장관은 임기 초반부터 비주류 성향을 드러냈다. 대표적인 사례가 경제정책부의 이름을 경제정책·개발계획부로 다시 변경한 것인데, 과거 수십 년간 존재해왔던 《침묵의 공모》에 따라 부서 명칭에 “계획화”가 의도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다. 아르헨티나는 2013-2015년 단기적으로나마 경제당국이 비주류 경제학파로 구성된 유일한 남미국가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들이 학계에서 새로운 헤게모니의 시현을 야기했다고 볼 수 없다. 아르헨티나의 주요 국립대학(라플라타(La Plata), 부에노스아이레스(Buenos Aires), 코르도바(Cordoba), 멘도사(Mendoza)) 중 어느 곳에서도 프로그램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고, 주류 경제학에 치중한 강의는 지속되었다. 비주류 경제학 강의는 부에노스아이레스 도시 지역의 몇몇 대학(산마르틴(San Martín), 킬메스(Quilmes), 헤네탈 사르미엔토(General Sarmiento), 모레노(Moreno))에서만 진행되었다.

위의 세 국가와 비교할 때 여타 남미지역 국가들의 경우 좌파 정권에 대한 비주류 경제성향의 영향력은 좀처럼 찾기 힘들다. 볼리비아, 베네수엘라, 에콰도르의 노력은 대체로 경제 재건을 위한 새로운 정치적 이상을 향해 있었고, 이는 대부분 국제기구들의 결정사향에 대한 반발의 성격을 지녔다. 신자유주의에 대한

6) Kicillof의 저서 《일반이론의 근간들(Fundamentos de la teoría general): 신격화된 케인즈의 이론적 결과물들(Las consecuencias teóricas de *lord Keynes*)》(2008)를 참고하라.

비판은 주로 정치적인 범주, 즉 《자주국가》수립을 위한 논리로서 활용되었고, 비주류 경제학적 논의는 주변부로 밀려났다. 따라서 볼리바르 연합 좌파들이 시몬 볼리바르(Simón Bolívar)부터 후아나 아수르두이(Juana Azurduy)에 이르는 자유화의 전쟁 주역들과 사상가들의 위상을 복구하는 데 주력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게다가 베네수엘라의 공동체권력 사례와 같이 아래에서부터 사회 변혁 과정들을 구축하기 위한 도구로서 원주민의 소규모 지역사회 또는 연합과 같은 문화적 유산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알프레도 세라노 만시아(Alfredo Serrano Mancilla) 저서인 《우고 차베스의 경제관》에서 발견할 수 있다. 볼리비아 통치권자의 사상에 영향을 미친 인물들로는 철학자 이스트반 메자로스(István Mészáros), 인식론자 오스카 바르사브스키(Oscar Varsavski), 마르크스주의자 안토니오 그람치(Antonio Gramsci)와 시몬 볼리바르(Simón Bolívar), 시몬 로드리게스(Simón Rodríguez), 오마르 토리호스(Omar Torrijos), 후안 벨라스코 알바라도(Juan Velasco Alvarado), 후안 호세 토레스(Juan José Torres), 사상가 후안 도밍고 페론(Juan D. Perón) 등이며, 경제학자로는 유일하게 미국 제도주의 경제학자인 존 케네스 갤브레이스(John Kenneth Galbraith)가 포함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 국가들이 겪은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은 비주류 경제학적 접근 방식을 활용하도록 인도했다. 특히, 볼리비아에서 열린 라틴아메리카 경제사상 연합(APEL)의 두 번째 학회와 2016년 9월에 세라노 만시아(Serrano Mancilla)에 의해 구상된 《차베스주의 8대 경제기조》를 주목할 만하다. 비록 국제거시정책에 있어 큰 변화를 일으키지는 않았지만, APEL은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남미지역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공공정책 수립에 기여한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이런 의미에서 멀지 않아 볼리바르 연합 국가들과 비주류 경제학의 관계는 순전히 수단(미국과 영국의 상황에 대처하는 대안으로서) 성격일지라도

보다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론적으로 라틴아메리카 좌파 정권과 비주류 경제학과 간의 관계는 최근 10년 동안 순탄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다. 남미지역의 경제 패러다임 변화를 위한 관심과 의지만으로는 지난 수십 년 동안 패권을 장악한 주류적 성향을 극복할 수 없었다. 한편,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들의 결정으로부터 이러한 현상에 대한 설명을 찾을 수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이들은 경제적 논쟁에 있어 전면적이지 않고 점진적인 여정을 택해왔다.

다른 한편으로는, 최근에 일어난 일련의 정치경제적 사태들을 신중히 고려해볼 때, 리만브라더스의 파산은 직후 선진국 경기침체와 그 여파에도 불구하고 어찌면 우리는 현 상황이 신자유주의의 위기보다는 신자유주의의 복원을 가리킬 수 있다고도 분석할 수 있다. 이러한 역설적 현상은 경제학계에서 광범위하게 논의되어왔다. 예를 들어, 콜린 크로치(Colin Crouch)는 저서 《The Strange Non-Death of Neo-Liberalization》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오히려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집중화는 심화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크로치와 유사한 입장으로 미로우스키는 그의 저서 《Never Let a Crisis Get You Started》에서 금융위기의 주범인 신자유주의가 책임에서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었는지에 대해 설명한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신자유주의는 집단적이고 단편적인 사상의 산물로 이른바, 마트로시카 전략 덕분에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반대파를 마비시킬 수 있었다. 예컨대, 밀턴 프리드만(Milton Friedman)은 1929년 대공황의 원인을 연방준비은행(FRB)의 미개입으로 지적했으나, 동시에 뉴스위크(Newsweek)지에 기고한 칼럼에서는 반대로 대공황의 유일한 원인을 정부개입으로 주장한 바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남미 지역 정부가 목도하고 있는 어려움들 역시 신자유주의와 주류 경제학 이론의 막강함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

정혜운 옮김